

문서번호 행정-2014-0804

수 신 윤병세 외교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날 짜 2014. 8. 21. (총 2 쪽)

##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외교부의 문화예술평화협력과 소속 공무원 등이 대외업무 협력을 위한 외부 간담회를 마치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청구해 부서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보 받았으며, 같은 내용을 신고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그 부패규모가 최소 50여회 이상 1천만원이 넘는 규모임이 밝혀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면 서까지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 조사의 내부청렴도(평가영역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부분에서 최근 4년째 최하위(2010년 39개 조사기관 중 39위, 2011년 24개 조사기관 중 24위, 2012년 25개 조사기관중 24위, 2013년 25개 조사기관중 25위)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꼴찌였던 외교부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3.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를 통해 드러난 부패행위는 외교부 문화예술평화협력과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다른 부서에서도 외부간담회 등을 마치 개최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청구하고 회식비 등에 썼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또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외교부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외교부의 감사업무 담당자나 간부들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 파견근무 중인 검사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입수한 뒤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공익제보 이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던 공익제보자의 근무태도를 새삼스레



문제 삼으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고 부당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외교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익제보자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민권익위도 조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해 수사의뢰하였는데, 귀 부에서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폐기나 직원간 말뭉치기 시도 등 진상을 은폐하는 어떤 행위도 중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음해를 비롯해 어떤 부당한 조치도 시도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음해와 부당한 조치를 취한 이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